

광주시, 대통령 공약 '한국형 시벨리 조성' 속도낸다

첨단 3지구에 조성...2단계 전략 수립 착수 올해 에타 신청 계획 기반시설·기업·인재·기술 집적화...산업융합 생태계 환경 조성

광주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산업융합 K-밸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첨단 3지구에 조성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2020~2024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2단계(2025~2029년) 사업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2단계 사업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에 최

고의 인공지능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실증도시를 구현해 기업 생태계 활성화 및 한국형 인공지능(AI) 밸리를 완성하는 게 목표다.

광주시는 지난해 정부에 2단계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아 기획예산처에 국비 7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단계 사업 기획연구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2단계 용역은 오는 6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수행하며, 광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1단계 사업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융합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기반시설, 기업, 인재, 기술을 집적화하는 것이다. 실험전략은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성장 환경 조성, 최고 인력과 기술이 집적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자자본 집적화 및 협업 생태계 환경 조성 등이다.

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실증 및 기업성장 가속화를 위한 사업 환경구축 등 안정적 AI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추진 총괄위원회, 핵심 이슈 파악과 전략 도출을 위한 실무위원회, 세부 전략과제 내용 검토를 위한 분과별 워킹그룹 등을 운영하고, 최상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광주시는 특히 1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25년부터 2단계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사업비 확보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 조성'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역 공약이라는 점에서, 사업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회의에 참석해 "광주는 일찌감치 인공지능 대표도시로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곳으로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 구축을 전략 과제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광주 곳곳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실증하고, 기업 하기 가장 좋은 산업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화 속 '택시운전사' 되보시겠습니까? 광주 동구는 제43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광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화 '택시운전사' 콘셉트를 모티브로 한 역사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2023년, 다시 달리는 택시 운전사'를 운영한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전남 미서훈 독립유공자 1263명 발굴

독립운동 사료 다수 확인...명예회복 '속도'

전남도가 미서훈 독립유공자 1263명을 발굴해 명예회복에 나섰다.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3·1 독립운동가 80명에 더해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독립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전남도는 15일 도청에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2단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2단계 연구용역'은 전남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공이 있지만 미서훈된 유공자를 직접 찾아 국가보훈처에 서훈을 신청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 말 1단계 사업 마무리를 통해 128명의 전남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했으며 이중 판결문 등 증거자료가 확보된 3·1 독립운동가 80명을 서훈 신청했다. 이어 용역팀은 5월 13일 기준 총 1263명의 독립운동 미서훈자를 발

굴하는 등 '독립유공자 미서훈자 2단계 발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독립운동 활동 분야별로는 ▲의병계열 265명 ▲3·1운동 136명 ▲학생운동 318명 ▲농민 노동운동 534명 ▲국외 10명 등으로 다양한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가 포함됐다.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일본군의 대한제국 의병 관련 기록, 목포 학생운동, 무안 3·1운동, 보성 의병 등 전남에서 활발히 전개된 독립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기록이 확인됐다. 규모 면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를 발굴해 전남이 명실상부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는 중간보고회를 계기로 추가 발굴과 함께 발굴대상자 전원이 서훈을 받도록 철저한 준비와 증거자료 확보에 온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f@kwangju.co.kr

시·도의회 "한전공대 출연 축소 즉각 중단하라"

광주·전남 野 광역의원들 성명...“한전공대 죽이기 선언”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소속 광주시의원들과 전남도의원들은 15일 정부의 한전에너지공대(한전공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일보 5월15일자 1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한전공대 출연 재검토와 축소 의도는 사실상 '한전공대' 죽이기 선언이다"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역행하는 한전공대 출연 축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전공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이라는 기치와 에너지산업 매카 구축, 신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정부에서 국회에서 제정된

특별법에 근거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설립됐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탄생한 대학을 명분없는 감사로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출연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 흡입내기를 넘어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치행위로 지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정권교체나 정치적 잣대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한전공대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고 당당한 국정 현안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전서현)을 제외한 민주·진보·정의당 의원 60명

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지난 3월 한전공대에 대한 표적감사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출연금 재검토 발언으로 한전공대를 흔들고 있다"면서 "한전공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출연금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은 "한전 상황이 어려워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이창양 장관의 발언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해결의 중요한 근간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와 지역 미래를 위해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 간 2000억 원을 출연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출연금 재검토는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장·부시장 관사 공공요금 지원 철회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광주시가 간부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전화·수도 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에서는 시장, 부시장,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유한 공유 주택을 일컫는 '관사'의 범위를 소유는 물론 임차까지 확대했다.

또 관사는 사용하는 부서 예산 범위에서 전월세 등 임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장 관사를 1급, 부시장 관사를 2급, 그 밖의 관사를 3급으로 분류했던 등급은 없앴다.

시장을 포함한 3급 이상 공무원 중 원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선 관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관내에 기존 거주지가 있거

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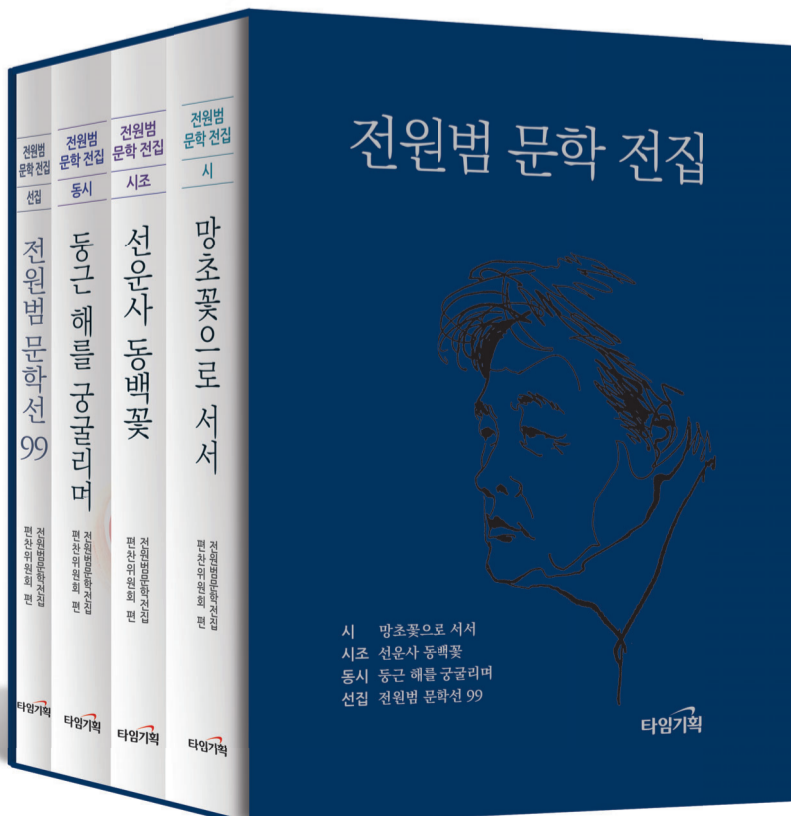
관사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 비용, 보일러·수도·가스·싱크대·세면기 등 기본 시설 설치와 보수 비용은 기존대로 지원한다.

하지만 기존 1~2급 관사에 지원했던 응접세트·커피 등 기본 장식품 구입과 유지비용, 전기·전화·수도 요금과 아파트 공동 관리비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아파트 8곳을 임차·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곳을 사용 중이다. 시장용 관사는 없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왜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말뉴스) 2023. 4.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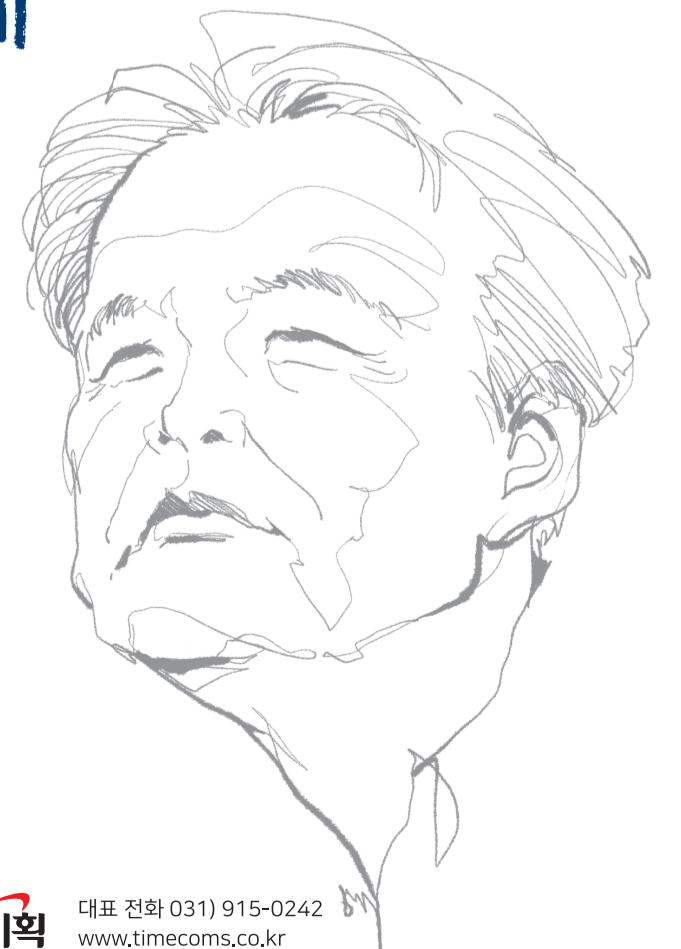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공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